

# '93년 건설부 주요업무 국회보고 요지

**하도급계열화 확대,  
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 다지기로...**

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「'93주요업무계획」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기업도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.

## 1) 건설기술관리법개정

감리자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하고 감리대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신기술인정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기술보호기간을 연장할 계획.

## 2) UR협상 등 건설시장개방 대비

3년마다 신규면허발급주기 단축하거나 수시발급.

## 3) 주택의 안전공급

올해 공공부문에서 25만 가구 등 총 55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소형위주로 공급하되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추이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영할 계획.

## 4) 공공택지 1천만평 개발

① 서울·부산 등 택지부족지역과 신도시 분양이 마무리되는 수도권지역은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.

2 주택분양 및 하자발생 등에 따라 입주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택지사업공제조합 설립.

## 5) 지역균형개발법 제정

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하며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다도해 특정지역개발과 병행해 경북북부·강원내륙·지리산·백제문화권·덕유산일대·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3차 국토개발계획기간에 추진할 개발계획을 수립.

## 6)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 지원

①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기금 지원

②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시 분양조건을 미리 명시

올해 공공부문에서 25만  
가구 등 총55만 가구 수준의  
주택을 소형위주로 공급할  
계획



해 분양가 책정에 따른 분쟁을 방지.

#### 7) 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

경제와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택지와 공장용지 등 경제적 활용목적의 토지를 값싸고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
#### 8) 도시재개발사업에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

①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공 및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공기업에 사업시행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개발 때 건폐율, 용적률, 건물고도제한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.

② 저층 및 노후주택단지의 재건축을 촉진, 지은지 20년 미만인 주택도 안전도와 토지이용도 등을 고려해 재건축을 허용해 줄 방침.

③ 지상의 각종 시설과 연계해 지하보행교통망과 주차장 등의 건설을 확대하고 지하개발지원을 위해 「지하공간개발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가능한한 연내 제정하도록 추진.

#### 9) 용도지역 통폐합

① 개발가능토지를 확대, 개발가능토지에 대해서는 제한행위열거방식을 도입해 환경오염 유발 등 특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 허용.

② 토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한 제3섹터형식의 법인설립, 합동개발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민자를 활용하는 개발수단을 도

입 시행.

#### 10) 토지거래허가기준 개선

토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농지매매증명만을 받도록 해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할 계획.

#### 11) 그린벨트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

그린벨트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후 관계기관과 협의,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그린벨트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.

#### 12) 공단개발참여 허용

① 수도권내에 대형건축물이나 호화사치시설을 신·증설할 경우 현행 물리적규제 대신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규제방안 도입.

② 4백50만평 규모의 공단을 신규지정,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공단개발참여 허용.

③ 수도권내부의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에 택지와 소규모공단을 개발하고 관광위락시설 및 무공해도시형산업을 유치할 계획.

#### 13) 노선정비계획 수립

교통량이 많은 지방도를 국도로 격상하는 등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종합적인 노선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항만배후도로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 도특회계에서 건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.